

왜 다시 열린 사회인가?

이 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1. 문제상황
2. 열린 사회 담론들: 앙리 베르그손과 칼 포퍼
3.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4. 열린 사회의 재구성

1. 문제 상황

2차 대전 이후 열린 사회는 인류가 도달한 정치적, 도덕적 성취의 최고 단계로 이해되어 왔다. 개인의 자유, 공개적 비판의 제도화,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들은 억압적 전통과 전체주의를 극복한 문명적 진보의 핵심 지표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정치철학과 사회이론 전반에 깊이 각인되었다. 열린 사회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열린 사회는 더 이상 자명한 성취이거나 안정된 모델로 기능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계는 외형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보와 자본은 국경을 넘어 순환하고, 과학적 지식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유통되며, 민주주의는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한 제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개방성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잠식되고 있으며, 비판의 자유는 알고리즘적 여론 형성과 감정의 극단화 속에서 실질적 효력을 상실해 간다. 합리성은 판단의 규범이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과 관리의 논리로 환원되고, 인간의 집단적 행위는 생태계의 회복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산출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회적 결과를 산출하며, 책임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열린 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제도적 이상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요구받는 문명의 형식으로 변모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열린 사회 개념이 형성되었던 역사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검

토할 것을 요구한다. 20세기 중반에 정식화된 열린 사회 이론은 집단 이기주의, 정치적 전체주의, 신화적 공동체주의, 역사법칙주의적 필연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강력한 규범적 설득력을 지녔다. 이런 맥락에서 앙리 베르그손과 칼 포퍼는 열린 사회의 철학적 토대를 제시한 사상가들로 평가된다. 베르그손에게 열린 사회는 생명의 창조적 약동이 도덕과 종교의 차원에서 확장된 결과였으며, 포퍼에게 열린 사회는 인간의 오류가능성을 전제로 비판과 수정이 제도화된 사회이면서, 역사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전체주의 이념에 대한 결정적 반론이었다.

두 이론은 논의의 영역이나 차원에서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특정한 문명사적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심적 행위 주체로 상정하는 사회 이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배경적인 자연 환경에 대한 암묵적 가정, 그리고 제도적 합리성이 스스로의 병리를 교정할 수 있다는 신뢰였다. 이러한 전제들은 20세기 산업문명과 국민국가 체제,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의 확장이라는 조건 속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생태 위기, 기술적 자동화, 비인간 행위자의 정치적·윤리적 부상이라는 21세기의 조건 속에서는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열린 사회가 전제했던 ‘주체’와 ‘행위의 장’ 자체가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열린 사회 담론들: 앙리 베르그손과 칼 포퍼

앙리 베르그손^{H. Bergson}은 직관을 축으로 세운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바탕으로,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를 도덕과 종교의 관점에서 구획 정리한다. 핵심은 지속이라는 질적 시간 개념과, 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의 직관이 전체 논증의 방향타를 이룬다는 점이다. 지속은 과거가 소멸하지 않고 현재 속에 잠재해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도록 만드는 의식의 흐름이며, 지성은 이 흐름을 분절, 고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직관은 흐르는 실재의 내부로 침투해 생성의 리듬을 전일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으로, 본능의 즉각성과 닮았지만 의식적 훈련을 통해 되찾은 직접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신과 물질은 생명의 창조적 약동이라는 더 깊은 층위에서 이어지지만, 인식의 통로는 지성과 직관으로 분기한다.

일반적으로 닫힌 체계란 외부와는 절연되어 상호 교섭이 없는 상태이며, 열린 체계란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규범이나 제도의 닫힌 체계란 그 적용의 범위에서 나와 타자가 구별되는 체계이다. 예컨대 노예제도 하에서는 노예는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배제된다. 또 닫힌 민족주의 하에서는 자민족과 타민족은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열린 체계란 어떤 제도나 규범이 국가 사회적 장벽을 넘어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태이다. 베르그손이 도덕과 종교를 닫힌 체계와 열린 체계로 설명했을 때의 의미이다.

이 틀에서 닫힌 사회는 의무의 도덕과 정태적 종교로 유지된다. 의무는 집단 보존을 향한 사회적 본능의 제도화로서 내부 결속과 외부 경계를 강화하고, 정태적 종교는 지성의 해체적 효과에 맞서는 자연의 방어적 반작용으로 현존 질서를 지지한다. 가정과 국가는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닫힘의 원리로 작동한다. 닫힘과 열림은 연속선상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작동 원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반대로 열린 사회는 사랑의 도덕과 역동적 종교가 축이다. 사랑의 도덕은 보편적 인류애로 확장되는 초지성적 충동이며, 역동적 종교는 직관에 뿌리를 둔 신비적 합일의 체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선 연대와 공감을 촉발한다. 여기서 열린 영혼은 경계의 해체가 아니라 보편적 포용을 겨냥한 창조적 개방으로 이해된다. 직관은 대상의 내적 생성에 참여함으로써 윤리의 동력을 대상 전체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베르그손은 인간 사회의 규칙이 비판과 수정을 통해 갱신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규칙은 본능의 필연성에 묶인 동물 사회의 규칙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필요의 언어로 재구성될 때 지성과 직관의 협업은 본능적 충동을 성찰로 전환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파국을 배경으로, 포퍼^{K. Popper}는 자유 민주주의를 ‘열린 사회’로 체계화한다. 핵심 토대는 비판적 합리주의다. 그는 지식의 확실성을 정당화하려는 낙관주의적 인식론을 비판하고, 모든 지식이 오류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진보는 확증의 누적이 아니라 비판을 통한 오류 제거에 달려 있으며, “나는 틀릴 수 있다”는 태도가 민주적 대화의 문을 연다. 정당화의 집착은 진리의 독점을 꿈꾸게 하고, 비판이 봉쇄되는 순간 정치적 독단으로 전락한다.

이 인식론은 가설-연역적 방법으로 구현된다. 문제 상황에서 잠정 가설을 세우고, 그로부터 입증 가능한 귀결을 연역한 뒤, 관찰과 실험의 비판적 시험으로 반례를 찾아 실패한 가설을 폐기한다. 반증가능성은 지식의 최상위 규범이며, 살아남은 이론은 잠정적일 뿐이다.

사회 존재론에서 열린 사회는 개인을 일차적 실재로 승인하고, 사회와 국가는

협동을 위한 인위적 장치일 뿐이다. 반면에, 전체주의는 사회나 국가를 개인 위에 올려놓는 존재론을 통해 개인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사회철학의 결론은 분명하다. 닫힌 사회는 금기와 비판의 봉쇄로 유지되고, 열린 사회는 비판을 제도화하며 규범을 수정 가능한 약속으로 다룬다. 자유는 간섭의 부재인 소극적 자유뿐 아니라 삶의 계획을 실현할 여건의 충족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포괄하며, 국가는 경제적 강제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해 이를 실질화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 남용의 위험 때문에 국가는 필요악으로 머문다. 공공정책의 기준은 행복 총량 극대화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고통의 체계적 감소다.

방법론적으로 포퍼는 역사법칙주의와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거부한다. 완전한 청사진에 의존한 전면 개조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고, 궁극목표의 절대화는 비판을 봉쇄한다. 이에 비해 점진적 사회공학은 작은 개혁을 실험하고 부작용을 반례로 받아들여 연속적으로 교정한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에서 치명적 오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경로라는 점에서, 비판적 합리주의와 정합적으로 결합한다.

3.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혁명은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이다. 마셜 맥루한 M. McLuhan의 통찰을 따라가 보면, 아날로그의 연속성과 유기적 총체 대신 디지털 0과 1의 이산성 離散性과 계산가능성이 지식의 형식과 사회 질서를 재구성한다. 세계는 네트워크적 지평에서 재조합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도 설계의 단위 자체가 데이터화된 흐름으로 치환된다.

영상 문화의 부상은 정보 질서를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영상은 즉시성과 감각적 몰입을 통해 이해에 앞서 감응을 호출하고, 분석보다 반사적 반응을 선행시킨다. 그 결과 인식의 무게중심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이동하며, 문자 세대의 규범 판단과 미래지향성에 비해 영상 세대의 선호 판단과 현재 지향성이 두드러진다. 현실과 가상은 상호 침투하여, 이미지가 1차적 의미의 지위를 획득하고 사건의 실재성이 영상화와 결합하는 역전이 나타난다. 증강현실의 확산은 혼성된 영상 현실을 일상화하고, 시각 문해력과 데이터, 플랫폼 문해력 같은 새로운 역량을 요청한다.

이 모든 변화는 탈진실의 확산으로 수렴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조작 기술은 사실과 허위의 기준을 붕괴시키고, 알고리즘은 기호에 맞춘 반복 추천으로 반대 의견의 접근성을 낮추어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정치는 정확한 진술보다 감정 동원을 우선시하고, 공적 진실은 병렬적 사적 진실들로 분절된다. 합의의 기반이 약화될수록 윤리는 공적 규범에서 회피해야 할 위험 요소로 전락한다. 대응의 과제는 명확하다. 사실 검증과 논증의 회복, 알고리즘 투명성의 제고, 상이한 관점의 상호 비판을 통한 사실 기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할 공화적 의지의 현대적 형태다.

인공지능의 부상과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21세기 문명의 핵심 동력으로 이해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화, 서술, 이미지 생성 등 다기능을 통해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준하는 잠재력을 드러냈고, 초지능의 가시화는 인간을 초과하는 다섯 번째 존재층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추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형식’의 변형이라는 인문학적 함의를 갖는다. 병행하여 생명공학은 유전체 해독과 편집, 장기 대체, 신경-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인지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정하고 있다.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경로는 둘이다. 첫째, 유전 개입과 내부 장기 보강, 사이보그화로 능력을 상향 보정한 트랜스휴먼의 경로다. 둘째, 고성능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의 경로다. 이때 표상, 추론, 예측, 학습의 외재화는 인간 결정의 선행, 유도를 가능케 해 통제 상실의 구조적 위험을 낳는다. 유발 하라리 Y. N. Harari가 지적하듯, 의식 없는 초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을 더 정확히 예측, 조작할 수 있지만, 규범적 참과 거짓을 스스로 식별하지는 못한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가 재검토된다. 경계 설정을 위해 운영 기준도 제시된다. 현존 인간을 변형시킨 존재는 일단 포스트휴먼이다. 그렇지만 포스트휴먼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변형인간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종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이다.

결론적으로, 기술 혁신은 존재론적 전환을 촉발했다. 열린 사회를 계승, 발전시키려면 인간 중심의 좁은 규범을 넘어, 새로운 행위자, 책임, 통제의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

열린 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현대 문명의 기저를 이룬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와 그 결과로 나타난 복합 위기를 진단한다. 인간을 가치의 최종 심급으로 세워 온 세계관은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주체, 계몽기의 이성, 과학,

진보, 칸트의 도덕 자율성에 힘입어 문명의 인식론적, 윤리적 인프라로 제도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측정, 표준화, 관리, 개발 같은 실천 장치가 일상화되며, 자연은 계산가능한 자원 창고로, 인간은 규범 정당화의 최종 심급으로 위치지어진다.

인간중심 문명은 세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존재론적 위계 구조다. 인간을 중심축에 두고 나머지 존재를 수단적 객체로 배치함으로써, 자연을 배경 무대로 환원한다. 둘째, 도구적 이성의 지배다. 목적의 정당성에 침묵한 채 수단의 효율만을 극대화하는 계산은, 인간 자신을 거대한 기술 체계의 부품으로 환원시키고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압력과 결합하여 계몽의 변증법을 드러낸다. 셋째, 윤리의 배타성이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인간 세계로 한정되면서 동물, 생태계, 인공지능은 제도적 무권리의 지위에 방치되고, 도덕적 불균형이 고착된다.

이 구조는 상호 증폭되는 세 위기를 초래한다. 생태적 위기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무화하여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가속한다. 윤리적 위기는 비인간 행위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공백을 남기고, 세계의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다룰 언어와 절차를 상실하게 한다. 기술적 위기는 기술을 중립적 도구가 아닌 자기증식적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 데이터 기반 관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자율성, 사생활, 책임의 경계를 재편하고 민주

적 통제 범위를 축소한다. 기술적 합리성이 윤리적 성찰과 공적 심의를 선행, 대체하는 순간, 기술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변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열린 사회는 인간만을 위한 자유와 윤리를 넘어, 다원적 존재들의 공존을 설계하고 확장된 책임을 규정하는 새로운 사회철학을 요구한다.

4. 열린 사회의 재구성

이 장은 20세기 열린 사회 담론을 21세기 조건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베르그손과 포퍼가 정초한 기존 열린 사회론은 전체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었으나, 인간 이외의 행위자와 생태적 조건, 기술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사상적 결함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였으며, 증강 인간, 자율적 인공지능, 생태 위기, 디지털 플랫폼 지배가 현실화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열린 사회는 인간

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다원적 존재들이 상호 책임을 분담하며 공존하는 조건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세 가지 이론적 축을 제안한다. 첫째, 얽힘 존재론은 개체와 관계를 대립시키지 않고 상호 구성적 조건으로 파악한다. 개인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안정화된 결절점이며, 한편으로는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닌다. 이 관점은 인간, 기술, 생태계, 인공지능을 차등적 행위자로 포함하는 다원 행위자 사회를 제도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연결망 반증주의는 포퍼의 반증주의를 네트워크 사회에 맞게 확장한 인식론이다. 반증은 더 이상 개별 명제와 관찰의 충돌이 아니라, 이론, 데이터, 장비, 제도, 알고리즘이 얽힌 연결망의 붕괴와 재배치로 이해된다. 나는 라카토슈^{I. Lakatos}의 연구프로그램 이론과 라투르^{B.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면서, 진리 접근을 네트워크 역량과 오류 제거 구조의 경쟁으로 재정의한다. 열린 사회란 반증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비판 경로와 데이터 흐름, 검증 장치를 분산, 개방한 사회이다.

셋째, 공화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치철학적 원리로 제시된다. 자유를 단순한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하고, 공동선, 시민적 덕성, 권력의 구조적 예방을 중시한다. 이는 포퓰리즘과 플랫폼 독점, 알고리즘 지배가 확산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열린 사회는 얽힘 존재론, 연결망 반증주의, 공화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관계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제도와 비판 친화적 네트워크, 공화적 시민성을 일상화하는 사회로 재구성된다.

여기서는 21세기 열린 사회의 새로운 적대자인 집단 광신주의를 성격 짓고, 그것이 디지털 환경과 정치적 독단주의와 결탁해 비판 가능성, 권력 분립, 소수자 보호의 기반을 어떻게 침식하는지 분석한다. 광신주의는 정동^{情動} 정치와 플랫폼 구조가 빚어낸 조직적 산물이다.

광신은 세 축이 결속될 때 완성된다. 첫째, 사실에 어긋나도 극단 신조를 고수하는 입장. 둘째, 교설을 절대화해 반증 통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증거 부인. 셋째, 필요할 경우 폭력과 강제로 타인에게 자신의 교설을 강요하는 태도다.

현대의 집단 광신주의는 세 얼굴로 나타난다. 종교적 배타주의는 신념을 사회 전체의 강제 규범으로 전이하며 권력과 결탁한다. 이념적 선민주의는 문명, 민족, 국가의 우월 신화를 보편 규범처럼 내세워 타자를 배제한다. 정치적 독단주의를 대표하는 포퓰리즘은 ‘진정한 국민’의 단일 의지를 대변한다며 대의 제도를 우회한다.

광신주의는 디지털 기술과 공진화하며 가속된다. 짧은 클립, 반복 재생, 알고리즘 추천은 즉시성의 쾌감과 결합해 확증 편향을 증폭하고, 폐쇄적 네트워크는 합의의 환영을 만들어 의심에 낙인을 찍는다. 합성 텍스트, 음성, 영상은 허위를 ‘보이는 증거’로 바꾸어 ‘우리의 사실’을 신속히 확정한다.

대응은 위에서 논의한 삼중 설계다. 얽힘 존재론은 행위가 연결망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주체성의 신화를 해체한다. 연결망 반증주의는 주장, 데이터, 코드를 추적, 재현, 감사 가능한 공개 절차에 노출시켜 성역을 없앤다. 공화 민주주의는 비지배와 상호 견제로 다수의 열광이 강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다. 이 설계를 통해서만 열린 사회는 광신의 배타, 독단, 강제에 맞설 수 있다.